

아동 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치성향과 세대(연령)의 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gnition of Socialization in Caring : Effects of Political Ideology and Generation(age)

정은수*, 임효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Eun Su Jeong(pooh80623@naver.com)*, Hyo yeon Lim(yellyhy@sjcu.ac.kr)**

요약

본 연구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의 확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정치성향과 세대(연령)의 차이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증명되었다. 특히 연령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에 세대(연령)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는 변수가 돌봄 문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도출 되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증세와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적 저항을 유발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동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변화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돌봄 문제는 소득의 계층차이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화를 경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적용하여 접근할 구체적 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아동 돌봄의 사회화 | 정치성향 | 세대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factors influencing socialization of child care. Political ideology and age were found as major predicting factors of socialization of care. Age, especially, was confirmed as an important predicting factor of socialization of care. Also, those with more progressive political ideology had the higher level of socialization of care. This finding reassured that socialization of care were considered as political issues in Korea. Income did not predict socialization of care, although it is said that a tax increase provoked conflicts between socioeconomic classes. Issues of caring were shared among people regardless of income levels. Therefore, specific interventions are necessary for preventing caring issues from using as a political lever, overcoming value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and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 keyword : | Socialization of Child Care | Political Ideology | Generation(age) |

1. 서론

탈산업사회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대량 실업과 소득 정체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가족경제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이끌었다. 즉 탈산업사회의 고용 불안은 기존 복지국가의 대전제인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남성가장의 임금에만 의존하여 생활하기 어려워지며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 국한되어 있던 여성노동력이 가정 밖에서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1]. 이로 인해 여성들의 노동 시장 확대라는 새로운 노동지형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라는 가족구조 내의 변화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여성이 담당하던 가족 내 돌봄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소위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일컫는 저출산, 고령화, 장기 불황 같은 사회적 문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업무로 여겨지던 돌봄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은 새로운 복지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2].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돌봄 노동의 주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로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가사노동과 돌봄은 여성 삶의 당연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남성’은 가족의 부양자이며, 여성은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주부’라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소극적인 태도로 그 개입을 최소화 하였다[3]. 특히나 한국사회의 경우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변화가 가속화 되었다. 이전에는 주로 가족 안에서 해결되었던 다양한 복지관련 욕구들이 IMF이후에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개인이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었다[4].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 고령자 수발과 같은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곧 퇴직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5]. 특히 아동 돌봄의 문제는 실제로 한국사회의 출산을 저하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출산을 역시 꾸준히 줄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05명이었으며, 이는 OECD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며 2001년 1.3명 밑으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6].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적인 추세라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출산은 그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따라서 출산률 저하를 야기하는 아동돌봄의 공백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에는 매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최근 출산을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성에 대한 역할 변화와 여성과 가족에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에 크게 기인한다고 본다[7][8]. 즉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돌봄으로 인한 부담이기 때문에 돌봄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돌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면 아동돌봄 분야가 하나의 산업분야로 확장되어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아동돌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루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서 아동돌봄 분야를 새로운 산업 분야로 개척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9]. 저성장의 장기적인 침체에 접어든 한국사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부과효과를 수반하는 아동돌봄 노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른바 사회서비스라 부르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체질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0]. 하지만 아동돌봄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인력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곧 막대한 사회지출이라는 문제와 연결되며 실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에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사회화 인

식확대는 중요한 선결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동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확대에 대중적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정치성향이다. 다양한 사회정책이 정치적 이념과 맞물려 다양한 대결 양상을 보인 것은 비단 아동돌봄 문제뿐 아니라 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인식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문제의 사회화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2010년 무상급식논쟁으로 촉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그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이다. 이 시기에 많은 국민들은 복지 문제의 사회화와 그 안의 아동돌봄 문제에 더욱 많이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아동돌봄 및 다양한 복지관련 논쟁이 한국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한국 정치 상황에서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소위 복지논쟁이 정치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11].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의 논쟁이 정치이념과 연결되어 진보와 보수로 대비되는 정치적 이슈가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졌으며 한국에서 아동돌봄 문제를 포함한 복지관련 이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상황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파급력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4].

정치성향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개념이 바로 세대(연령) 간 분열 양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과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해 세대(연령) 간에 분열양상을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즉 세대(연령)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사회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세대(연령)가 높을수록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12-14]. 또한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의 영향으로 돌봄을 여성의 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15].

또한, 남상희[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의 정치성향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맥락 중 하나가 바로 연령임을 밝히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부터 나타났던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연령의 차이 즉 세대차이로 분열되

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그 현상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 2~30대는 진보적 성향의 야권을 50대 이상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여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아동돌봄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은 매우 중요한 관련 요소라 하겠다. 진보와 보수로 대비되는 사회분위기 속에 복지정책이 정치 전면에 떠오르는 현 사회현상을 살펴볼 때,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 보여 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 즉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과 세대(연령)의 차이가 과연 아동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정책, 그 중에서 아동돌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제도와 더불어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과정으로 기존의 다른 제도와 정책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수용을 필요로 하고 이와 더불어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화 인식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복지국가로의 발전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돌봄의 다양한 분야 중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한다. 여성에게 아동 돌봄은 여성의 생애 주기 상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맞물려 있고 단순한 돌봄의 의미를 넘어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 생산성과 관련이 깊으며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17-19]. 최근 정부는 0-2세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보육

을 실시하는 것을 부모의 취업 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 돌봄 분야에 대한 재원의 부담과 돌봄의 책임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19].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과 연결 지어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화 인식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시사점이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아동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편하고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사회화 인식을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우리사회의 아동돌봄 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참여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서비스 제공자 관련 파생분야에 대한 기본적 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로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성향과 세대(연령)가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둘째, 정치성향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세대(연령)차이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돌봄의 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화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용어는 사전적으로 “사적(私的)인 존재나 소유를 공적(公的)인 존재나 소유로 바꾸어 감”을 의미한다[20]. 이는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던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대리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재화와 서비스생산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사회화로 보고 있으며,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경제학에서의 마찬가지로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특정한 재화생산에 대한 국가 개입뿐 아니라, 동시에 행위주체의 활동목적을 기준으로 재화의 생산과 제공을 통해 공익 달성이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사회화 되었다고 상정한다[21]. 즉 국가, 시장(영리), 비영리라는 행위주체와 각 행위주체를 통해 소요되는 자원의 출처와는 관계없이 조직 운영의 목적이 공익 추구인 경우와 조직의 운영을 통해 공익적 가치, 즉 공공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 사회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돌봄이 사회화 되었다는 것은 돌봄이라는 문제는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며 국가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22].

돌봄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다른 사회제도와 비교하여 개개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을 보편적인 시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확장시켜 돌봄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규정되고 제공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연대성 원칙에 기반을 두어 보편적인 시민의 기본권의 실현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돌봄을 사회화 한 것으로 이해하며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 또는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3].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 인식은 돌봄이라는 주제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이며 이를 위해 비용과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누구로 되어있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분석해 보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중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파생분야를 논의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문헌에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

다지 많지 않다. 주로 돌봄 서비스 자체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대부분이다. 주로 노인 및 아동돌봄서비스의 이용자의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연구[24][25],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여 품질향상 방안을 검토한 연구들[26][27]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공되는 돌봄의 서비스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돌봄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게 되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연구이다. 이는 돌봄에 관한 서비스로 문제를 국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돌봄의 문제를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 매년 거둬지는 무상보육예산과 관련된 사회이슈는 돌봄의 사회화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국민의 대표기구 혹은 집단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가치관에 맞는 국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선결요인이 된다[28].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가치관 중의 한부분인 정치성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의 입장 혹은 국민들의 역할을 대변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가치관 항목 중에서도 필수 분석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이런 정치성향은 투표라는 실질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힘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정치성향의 파악 또는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11]. 이런 맥락에서 정치성향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정치성향 구분을 위해 이용되는 모델은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모델이다. 여기에 한층 발전된 분류 방법은 중도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정치성향 분석 혹은 이해를 위해 이용되는 진보 혹은 보수 구분 모델의 기

원은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¹ 더불어 현대 정치에서 좌파는 급진 혹은 진보로 우파는 보수로 통용되어 사용된 것이다[9].

물론 정치성향은 단순 양분하여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복잡한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많은 한계점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9]. 그렇지만 많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좌우(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에 근거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에서 노인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많은 상류층일수록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주의적 태도가 낮아지고 집단가치를 강조하고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다[29][30]. 또한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이 높고 사회적 지배성향, 불평등에 대한 수용이 높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 Jost 등[31]에 따르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안정성을 추구하며 변화를 회피한다. 변화는 지금의 안전성 대신 불확실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정을 지향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의 불평등한 체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즉 현재의 위계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상태인 동시에 우리가 위협할 수 있는 변화들을 겪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현재의 불평등한 상황을 수용하고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16][31].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문제 중 하나가 세대 간의 이념의 대립이었다. 2002년 대선에서부터 나타났던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2012년에까지 이어져 18대 대선에서는 야권으로 대표되는 진보, 여권으로 대표되는 보수에 대한 이념의 차이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6]. 즉 젊은 세대는 진보적 성향을, 나이든 세대는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와

1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소집된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공화파가 오른쪽에 왕당파가 앉은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롱드(Girondins)파와 자코뱅(Jacobins)파가 두 파로 갈려 자리해 있었고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자리하면서 주로 부유한 부르주아를 대변하였고, 자코뱅파는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들은 주로 소시민층과 민중을 지지기반으로 중앙집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복지와 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통제 경제도 불사한다는 주장을 했다.

정치성향의 고착은 다양한 사회정책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전반에 대한 해결방법에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돌봄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이나 노인 부양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무상보육으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아동돌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것이다.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은 아동돌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짐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정리하면 국가가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사회유지를 위해 비용을 부담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즉, 아동돌봄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들도 책임을 가지고 조세로 아동돌봄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재로서 그 질도 국가가 담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21]. 정치성향은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즉, 정치적 관점·소속 당파와 사회단체·정치와 연관된 각종 사회적인 관계를 말한다[20].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성향은 진보 혹은 보수의 양분적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연령(세대)과 정치성향을 제외하고 아동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돌봄 문제의 사회화 자체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인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련해 언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 및 복지인식에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섭[32]에 따르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그것이 때로는 사회경제적 계급요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기이해 관계론에 따른 것으로 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는 개인이 속한 특정 집단의 자기이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관점에서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가 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의 지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

으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사회복지 정책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이 낮을수록, 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할수록 복지정책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32].

특히 성별은 주요한 변수로 많이 언급 되었는데 많은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지정책에 대한 비용부담의사를 보이고 증세에 관해서도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34]. 또한 소득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복지 의존적 경향이 강해 복지에 친화적 성향을 보인다는 주장과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 소득은 명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3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한 2차 자료 분석연구로 연구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에서 제공한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서울 및 7개 광역시와 9개의 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대표성을 가진 자료이다. 복지패널자료는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 복지수급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구축된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한 8차 년도에는 부가 조사를 통해 복지인식을 조사하였으며 8차년도 조사가 있었던 2013년 자료는 2013년 1월부터 상반기 내에 조사된 자료로, 2012년 대선으로 더욱 강하게 대두된 복지논쟁, 정치이념논쟁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조사된 자료로 정치성향과 정치만족도, 소득에 따른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을 연구하는 본 연구의 주제에 매우 의미 있는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8차 년도 부가조사 자료이며, 분석대상은 복지패널에서 투표권이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모형의 변인(정치성향,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 연령, 통

제변인)에 대한 결측값이 없는 대상자로 하였다.

2. 조사도구

1)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의 사회화 인식 관련 측정도구에 대해, 복지 패널의 부가질문 중 응답자의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즉 복지인식에 관한 10개의 문항 중 아동돌봄 분야의 사회화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복지인식’ 10개의 항목 중 다변 문항(어린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한다)과 차변 문항(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으로 ‘매우 동의한다’ 1점에서 ‘매우 반대한다’가 5점 까지 순위화 하여 측정되는 변수로 차변 문항은 역코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정치성향과 연령

본 연구에서 정치성향은 한국복지패널자료 복지부가 인식 설문 문항에서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선택지는 1) 매우 진보적 ~ 5) 매우 보수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연령 변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특별히 제시 되지 않았으나 조사시점인 2013에서 응답자의 출생연도를 뺀 숫자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연령과 정치성향을 제외하고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인 성별, 소득, 교육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소득은 경상소득²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성별은 복지패널 대상자의 성별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복지패널 가구원설문문항의 내용 중 교육연수를 활용하

였다. 교육연수는 연구대상자가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최종학력까지 교육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연속형 변수로 투입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초자료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확인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결과를 토대로 통제변인을 확인하여 최종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세대(연령)와 정치성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로 통제변수들만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2단계는 독립변수(연령)를 추가하고 종속변수와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3단계로 두 번째로 고려된 독립변수(정치성향)를 추가하고 종속변수와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독립변수가 유의하다고 분석할 것이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3936명으로 이중 남성은 1709명(43.4%)이었으며 여성은 2227명(56.6%)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으며, 20대가 283명(7.2%), 30대가 554명(13.8%), 40대가 715명(18.1%), 50대가 673명(17.1%), 60대가 611명(15.5%), 70대 이상이 1110명(28.3%)명이었다.

월 소득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 633명(16.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834명(21.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566명(14.4%), 300만원 이상 ~ 400

² 경상소득 =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만원 미만인 537명(13.6%),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은 463명(11.8%),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은 305명(7.8%)이었으며, 마지막으로 700만원 이상으로는 598명(15.2%)이 분포하였다. 학력은 무학은 367명(9.3%), 초등학교 졸업은 790명(20.1%) 이었으며 중학교 졸업은 494명(12.6%), 고등학교 졸업은 1102명(28.0%), 전문대학 졸업은 385명(9.8%), 대학교 졸업은 702명(17.8%), 대학원 이상은 96명(2.4%)이었다. 복지패널의 특성상 주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았으며 가구원수를 고려해 봐야겠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수가 많이 있음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936	
항목	구분	n	%
성별	남	1709	43.4
	여	2227	56.6
연령	20대	283	7.2
	30대	544	13.8
	40대	715	18.1
	50대	673	17.1
	60대	611	15.5
	70대 이상	1110	28.3
	소득 (만원)	100만원 미만	63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834	21.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66	14.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37	13.6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63	11.8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05	7.8
700만원 이상		598	15.2
교육 수준		무학	367
	초등학교	790	20.1
	중학교	494	12.6
	고등학교	1102	28.0
	전문대학	385	9.8
	대학교	702	17.8
	대학원(석사)이상	96	2.4

2)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정치성향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

주요 변인인 연령과 정치성향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 수준은 2~10점 사이에서 평균 5.93점(표준편차 1.34)로 조사되었다. 정치성향은 점수범위 1~5점 사이에서 평균 3.22(표준편차 .93)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세에서 94세 사이에서 평균 55.55세(표준편차 17.17)로 조사되었다.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N=3936			
항목	범위	평균	표준편차
연령	21 ~ 94세	55.55	17.17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	2 ~ 10점	5.93	1.34
정치성향	1 ~ 5점	3.22	.93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의 결과와 같다.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소득, 성별, 교육수준, 정치성향, 연령(세대)이었다.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과 소득, 그리고 교육수준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별과 정치성향, 그리고 연령(세대)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N=3936						
항목	돌봄의 사회화 인식	소득	성별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연령 (세대)
돌봄의 사회화 인식	1					
소득	.097***	1				
성별	-.040***	-.096***	1			
교육 수준	.116***	.570***	-.208***	1		
정치 성향	-.103***	-.153***	-.012	-.196***	1	
연령 (세대)	-.184***	-.561***	.022	-.682***	.260***	1

*P<.05, **P<.01, ***P<.001

3. 정치성향과 연령(세대)이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치성향과 연령이라는 주요한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의 다중

표 4. 정치성향과 연령(세대)차이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N=3936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VIF	B	S.E	β	VIF	B	S.E	β	VIF	
통제변인	소득	.172*	.071*	.047*	1.481	-.020	.073	-.005	1.614	-.020	.073	-.006	1.614
	성별	-.047	.044	-.017	1.046	-.115**	.044**	-.042**	1.076	-.120**	.044**	-.044**	1.077
	교육 수준	.069***	.016***	.085***	1.534	-.026	.019	-.032	2.202	-.028	.019	-.035	2.204
	연령					-.016***	.002***	-.208***	2.098	-.015***	.002***	-.194***	2.155
정치성향										-.088***	.023***	-.061***	1.074
모델핏	상수		5.033***				7.097***				7.333***		
	R ²		.015***				.036***				.039***		
	adj. R ²		.014***				.035***				.038***		
	F		20.095***				36.454***				32.094***		

* $p < 0.05$, ** $p < 0.01$, *** $p < 0.001$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값(VIF)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변수 VIF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 모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1단계에는 통제변수들만을 투입하여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F값이 20.095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어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통제변수 중 소득이 높을수록,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만을 투입한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을 설명하는 기본모형의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설명력 크기는 작지만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는 독립변수 중 연령(세대)을 투입하여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값이 36.454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형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명력은 3.5%로 나타나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보다 설명력이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F값이 32.094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정치성향도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

은 3.8%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의 확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주요 결과에 따른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은 소득, 성별, 교육수준, 정치성향, 연령(세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치성향, 연령(세대), 성별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문제보다 좀 더 확장된 복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강정희 외[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강정희 외[4]에 의하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복지인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밝히며 아동돌봄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는 개인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작동하는 배경인 국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정치만족도가 복지인식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유석[35]의 연

구에서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고 부양과 양육의 부담 등으로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복지 전반에 친화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양한 사회복지적 문제에 대하여 성별과 연령 등의 요인들은 복지관련 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G. Esping andersen[1]에 의하면, 아동돌봄의 사회화를 언급하며 ‘탈가족화’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후기산업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아동돌봄의 공백은 가족이 떠맡고 있는 아동돌봄의 무거운 책임이 시장이나 국가의 복지제공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동돌봄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접근 즉, 사회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가족의 아동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변화에 따라 아동돌봄의 사회화를 이루는 과정이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이며 이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정치성향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정치성향이 1단위 높아지면(보수적일수록)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화 인식 정도는(0.088단위 만큼)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진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부에 대한 재분배, 즉 사회적 평등과 부의 분배의 가치에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사회복지 및 부의 재분배 및 평등에 대한 정부 정책과 책임,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35][36].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진보적일수록 아동돌봄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개입을 찬성하는 반면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도 부정적이며 아동돌봄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여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희영 외[37]는 사회복지에 관한 태도의 특성연구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복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념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된 주장이 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부의 재분배 및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은 정치성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다양한 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념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아동보육과 노인돌봄으로 대변되는 돌봄의 문제는 기존의 소득보장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비해 소득재분배 및 정부책임에 대한 수혜 계층의 폭이 더 넓어지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가가 그 책임을 가질 경우 당장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 역시도 증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다른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복지태도에서 세대 간 균열 양상을 연구한 이상록 외[13]의 연구에서는 복지관련 분야의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정치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성향은 정치적 입장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보다는 세대 간의 분열양상을 보인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다. 하지만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선별적, 잔여적으로 제공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 일반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새로운 국가의 책임을 대두시키게 되는 계기로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38].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를 보임으로서 돌봄의 공백으로 야기된 당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 개인이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등과 불평등, 분배에 대한 가치관은 정치적 성향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진보적일수록 친복지적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14][34][39]. 따라서 돌봄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을 정치적 수단화하는 것을 경계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연령의 차이 역시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연령이 1단위 높아지면 아동 돌봄의 사회화 인식은 0.015단위만큼 낮아졌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령의 경우, 고령자 일수록 복지 의존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 친화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지만(류진석, 2004) 실증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복지인식의 분화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나[39-41],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32]. 또한 특히 아동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뿌리박힌 한국 사회에서는 연령이 주요한 설명 변수 중 하나로 증명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돌봄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에 연령 차이로 설명되는 세대 차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아동돌봄 문제를 서비스제공 중심의 편협한 관점에서 단순 서비스에 국한된 접근보다는 세대 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적용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는 변수가 아동돌봄 문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주장들은 소득은 많은 사회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들로 도출되었다. 강정희 외[4]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많이 받는 저소득층일수록 복지인식이 높으며 복지국가의 역할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납세자의 지위와 관련된 주요한 변수 이전에도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편은 많은 예산과 고도로 발달된 제도가 필요하게 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제공기관과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예산이 소요되고 증세가 필수적인 선결요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 및 그들의 동의와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복지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세금이나 기여금을 많이 내야하고 그에 따라서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4][32]. 이는 돌봄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과 돌봄 비용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고려한 논의들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소득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한 변수로는 도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복지 증세와 관련하여 납세의 의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게 되는 고소득계층의 국민적 저항을 야기하기 쉬우나 아동 돌봄에 대하여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당장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해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복지패널의 특성 상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의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된 자료로 분석결과에 대한 편향이 있을 수 있어 반복 연구와 연구대상자를 달리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정치성향은 한국사회에서 기존 서구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는 다른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정치성향의 차이와 연령의 차이라는 변수를 확인했으므로 아동돌봄 문제에서 정치적으로나 연령에 따른 세대의 대결적 분열 양상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G.Esping-Andersen/주은선, 김영미역, *복지체제 위기와 대응*, 서울: 성균대학교 출판부, 1999/2014/1999.
- [2] Taylor-Goody, *New Risk and Soci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3] 김미경,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통합적 정책설계에 대한 제안,” 사회과학연구, 제25권, pp.1-21, 2008.
- [4] 강정희, 염동문,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논총, 제4권, pp.319-351, 2014.
- [5] 김혜정,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pp.113-152, 2011.
- [6] 통계청, 『2014년출생통계(확정),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출생통계』.
- [7] 윤성호,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차기정부의 과제: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정보, 제26권, 제3호, pp.181-200, 2012.
- [8] 이미옥, 명성중,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정보, 제29권, 제1호, pp.331-350, 2015.
- [9] 윤성호,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차기정부의 과제: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정보, 제26권, 제3호, pp.181-200, 2012.
- [10] 이미옥, 명성중,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정보, 제29권, 제1호, pp.331-350, 2015.
- [11] 임준형, *한국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2] 이중섭,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73-99, 2009.
- [13] 이상록, 김형관,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pp.433-458, 2013.
- [14] 류진석,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4호, pp.79-101, 2004.
- [15] 김명연, 김의철, 박영신,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 제1호, pp.181-204, 2000.
- [16] 남상희, *정치성향의 세대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들: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평등에 대한 수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7] 신경아,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정책과 여성노동시장 조건-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18] 송다영, “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보육 부분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4권, 제3호, pp.1-33, 2011.
- [19]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편집부, “[논평] 사회적 갈등 조장 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월간복지동향(2013), pp.82-83, 2016.
-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2015.
- [21] 양성욱, “노연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1호, 2012.
- [22] 김희진, 전희정, “일반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욕구, 복지인식 및 복지서비스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6권, pp.95-121, 2010.
- [23] T. Bahle,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13, No.1, pp.5-20, 2003.
- [24] 김은정, 정소연, “SERVQUAL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과 서비스 만족도,”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pp.191-217, 2009.
- [25] 신정환, “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2012.
- [26] 안세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의 효과,” 社會保障研究, 제26권, 제4호, 2010.
- [27] 김은정, 김정아, “대구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품질평가, 만족도 및 재이용의사: 문제아동조

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제2권, 제2호, pp.11-20, 2012.

[28] 주은선, 백정미,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호, pp.203-225, 2007.

[29]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 제1호, pp.181-204, 2000.

[30]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5권, 제1호, pp.199-145, 2000.

[31] J. T. Jost, “The end of the end for ideology,” American Psychology, Vol.61, pp.651-670, 2006.

[32] 류만희, 최영,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복지의식, 계층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pp.191-210, 2009.

[33] 김영순, 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9권, 제1호, pp.211-240, 2011.

[34] 서복경, 황아란,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1호, pp.5-34, 2012.

[35] 최유석,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38권, 제1호, pp.57-83, 2011.

[36] 김신영,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1권, pp.87-105, 2010.

[37]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서울: 을유문화사, 2004.

[38] 김태일, “한국사회서비스 특징과 전망,” 아세아연구, 제5권, 제2호, pp.42-80, 2011.

[39]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한국학연구, 제45권, pp.183-212, 2013.

[40] 모지환, 김행렬,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제24

권, 제1호, pp.179-199, 2009.

[41] 김희자,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논, 제16권, pp.59-88, 2013.

저 자 소 개

정 은 수(Eun Soo Jung)

정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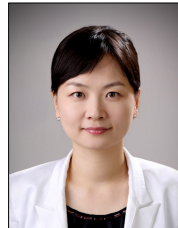


• 2014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중,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 전공

<관심분야> : 저출산, 가족정책, 돌봄, 보육정책, 여성정책

임 효 연(Hyo yeon Lim)

정희원



• 2008년 3월 : Osaka City University 노인복지전공(Ph.D)
• 2008년 9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례관리, 사회복지상담